

<성명>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의 요구다!

지난 1월 15일, 국회 농해수위 안전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등 6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농해수위 안전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해 올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특히 기준가격을 정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및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있고, 이들 위원회를 통해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게 하고 있어 시장 작동을 멈추게 하는 법안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다양한 농민단체 및 농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안 입법을 논의해왔고,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성안·발의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법안을 의결(12월 20일)했으며, 이후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들 법안을 안전조정위에 회부했으나 국민의힘은 안전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시간끌기에만 집착해왔다.

이것이 진실인데도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와 농민의 상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관리를 이유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TRQ 수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야기해왔다. 정부의 물가관리 실패로 인한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가는 각종 재해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저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어 농가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21대 국회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며 농민의 요구다.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을 총선용 정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실천적 민생'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